

II.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문제점

2박3일간 종합토론을 끝으로 활동 종료되는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위는
 ▲ 초법적·일방적 원전 중단 결정 ▲ 공론화위 설립 및 운영의 법적근거 희박
 ▲ 공론화위의 자료 팩트체크 능력 부재 ▲ 자료 제출원칙과 틀을 어긴 건설
 중단측 ▲ 대통령과 정부의 시그널 발언 등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.

1. 공론화위의 추진과정

- 공론화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지난 7월 24일 출범
 - 정부는 『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』(국무총리 훈령)을 7월 17일 제정하여 공론화위를 설치
 - 공론화 주제는 신고리 5·6호기 건설을 지속할지 영구중단할지 여부에 한정
-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·관리하고, 도출된 결과를 기초로 공론화 보고서(권고안)를 작성하여 정부에 10월 20일 제출할 예정

[표]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위 주요일정

진행 일자	17.7.24	17.8.23	17.8.25 -9.10	17.9.13	17.9.16	17.9.16 -10.15	17.10.13 -10.15	17.10.20
내용	공론화위 출범	조사기관 선정	1차 설문조사	시민참여단 구성	오리엔테이션 및 중간 설문조사	시민참여단 숙의과정	종합토론회 및 최종 설문조사 (15일)	공론화 보고서 (권고안) 제출

자료: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

- 공론화 일정은 1차 설문조사, 시민참여단 구성, 중간 설문조사, 숙의과정(학습·토론), 최종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됨
- 공론화위 마지막 일정은 10월 13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 시민참여단 종합토론인데, 마지막날인 15일 실시되는 최종 설문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권고안에 담길 내용이 사실상 결정됨
- 권고안을 받은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고리 5·6호기 건설 중단 재개 여부를 최종 심의·의결함

2. 공론화위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점

○ 신고리 5·6호기 건설 중단은 초법적·일방적 결정

-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난 신고리 5·6호기 건설 중단은 국무회의 정식 안건도 아니었음
- 원안위 위원장은 불참한 채 해수부 장관이 중단 의견을 내고 대통령이 일단 중단하자고 초법적·일방적 결론을 내림

○ 공론화위 설립 및 운영의 법적근거 희박

- 현행법에서는 공론화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별도의 시행령을 만들 수 없었고, 국무총리 훈령(690호)을 근거로 설립함
- 설립 후에 운영세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

- 따라서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의 최종 의견을 받아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음

○ 대통령의 시그널 발언과 원전 건설중단 홍보에 열올리는 정부

- 대통령과 산업장관 등은 지속적으로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한 시그널 발언을 해오고 있음
- 산업부, 환경부, 원자력문화재단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원전 폼하뉴스와 탈원전 홍보에 열올리고 있어 정부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

○ 토론회 자료 제출원칙과 룰(Rule)을 어긴 건설 중단측¹⁾

- 시민참여단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료집 목차와 내용의 제출시한이 정해져 있었음
- 그러나 건설 중단을 원하는 시민단체가 이를 어기고 건설 재개측 자료를 컨닝한 후 뒤늦게 내용의 45%나 수정·보완한 자료를 제출함
- 건설 중단측 시민단체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룰(Rule)이 있는지 몰랐다면 시치미 떼고 억지로 일관함
- 결국 9월 16일 열린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서 토론회 자료집을 제때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름

○ 공론화위의 자료 팩트체크 능력 부재 및 방기

1) 내일신문 9월 29일자 기사

- 공론화위는 자료 팩트체크 책임을 방기한 가운데 허위·과장·왜곡된 자료가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됨

[표] 건설 중단측이 주장하는 허위사실2)

	(건설 중단측) 허위 주장	(건설 재개측) 사실 확인
방사능 피해	-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망자는 1,368명	-일본 정부로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받음
	-원전 주변 5km이내 갑상선암 발생률 2.5배 증가	-월성원전 1호기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고법 “갑상선암 발생은 원전 운영과 무관하다” 판결
	-원전 정상운전 중 매일 방사성 물질 배출, 방사능 피폭	-주변 주민이 받는 방사선량은 연간 0.01밀리시버트(굉장히 미미한 양)
	-아무리 작은 방사능이라도 암 발생확률을 증가시킴	-유엔과학위, “100밀리시버트 미만 방사선에서 암 발생 위험도 증가는 확인되지 않음”
원전 수출	-UAE 수주 수익금 중 3조원을 벡텔사에 지급 -우리 원전기술이 없음	-벡텔사에 지급한 돈은 300억원 -원전 핵심기술 모두 보유
	-핀란드 원전 수출시 우리 원전 안정성을 설득하지 못하고 설계 변경 의혹 제기	-설계 변경은 국가별 규제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며 안전성 문제 없음
원전 추진	-신고리 5·6호기는 졸속행정으로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음	-주민 공람, 설명회, 공청회 등 3단계로 의견 수렴
	-지역주민들이 원전 건설을 반대했으나 정부가 밀어붙임	-지역주민 자율 유치에 의해 시작된 사업임
환경	-원전이 줄어드는 나라는 온실가스도 줄어듦	-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음
전력 수급	-탈원전·탈석탄시에도 발전 설비 예비율은 충분	-2024년부터 발전 실비 예비율은 10%미만으로 전력공급에 문제가 생김

[작성: 장경수 선임연구원 ☎ 02-3786-3818]

2) 조선일보 10월 11일자 기사